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 전망

서 재 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보다 강경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도 한몫하고 있는데다가, 북한이 명시적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는 측면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대남정책의 거시적 흐름에서 보면 북한의 태도를 어느정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북한이 명시적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묵시적 반응은 이미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의중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금년 신년공동사설과 지난해 10·4 남북정상선언이다.

신년공동사설과 10·4 남북정상선언에 나타난 북한의 태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그해의 시정방침으로 중요한 지침이 된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나가야 한다”며 남북간 합의 이행을 강조했고,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조국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게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10·4 남북정상선언의 철저한 이행이란 남북경협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명시적인 정책방향까지 제시하였다.

신년공동사설은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확실히 이명박 정부와 더불어 남북관계에서 확대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희망을 천명한 셈이다.

또한 지난해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대선을 두달 남긴 임기말의 정부와 10·4 합의를 한 것은 차기정부와의 거래를 의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당선인이 당선

된 뒤에 나온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변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남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10·4 남북정상선언을 합의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 확실히 북한은 이전의 북한이 아니다.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배경

북한은 지난해 10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경제부총리회담 등 잇단 회담에서 방대한 합의를 해놓은 것에서 드러났듯이 남한을 대하는 태도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남북회담 유사 이래로 가장 방대한 양의 합의이다. 이러한 합의는 노무현정부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한의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에 상관없이 지난해 10월 쯤에는 이미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정책이 변화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10·4 합의가 이루어지기 하루전에 6자회담 10·3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10·3 합의에서 북·미 사이에 핵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핵문제의 합의는 곧 북·미 관계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합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북한은 핵문제 관련 6자회담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남한에 대한 접근을 본격화한 측면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10·4 합의의 내용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2007년 10·4 합의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남정책의 진전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될 무렵에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추구하고자 하던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10·4 합의에 호응한 것은 국제 환경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던 당시의 상황으로 복원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돌이켜보건대, 과거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직후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협상과 병행하여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임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호응한 바 있었는데 1992년 11월에 북핵문제가 돌출됨에 따라 남한과의 관계가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로드맵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남북관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변화를 야기한 두 번째 원인은 경제난 때문이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을 천명하였다. 그 동안 북한주민들이 북한체제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진 데는 김정일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왔으나, 대량 아사자를 낳은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10대 전망목표를 제시하여 휘황한 미래가 곧 온다고 선전하였으나 역시 구호에 그치고 말았으며, 해마다 크고 작은 약속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주민들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기 어렵게 되어 있다. 정권에 대한 불신이 정말 심화되면 체제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는 잘 알고 있다. 이제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의 시늉이라도 내지 못하면 북한정권의 미래는 불확실해진다.

북한이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회주의 ‘본태’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가 기본에서부터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제 내부결속에 총력전을 펴면서 남한과 외부에서 자본유치에 주력하는 정책이 전망된다. 2012년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이다.

북한이 대남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에의 과도한 의존성이다. 지난 십수년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졌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는 중국의 영향력이 김정일의 권력유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원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북중관계는 순망치한(唇亡齒寒)으로만 단순화할 수 없는 이면이 있다.

결국 북한은 남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의 전통적인 외교 패턴인 등거리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고 나아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 견제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도 얻어내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도 상쇄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

그렇다면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대해 순순히 호응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 길들이기를 하면서 막무가내로 버틸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일부 표출되었다. 북한은 “북남 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에 대하여 “공리공영, 유무상통”이라는 ‘8자’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정부의 상호주의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북한식의 대응방식을 내놓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를 북한식 상호주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한의 상호주의적 요구에 대하여 “유무상통”의 원칙으로 호응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식 대남 포용전략으로 이명박을 노무현화시키는 전략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에게 커다란 관심거리이다. 북한의 전략에서 보면 비핵화는 6자회담 합의에 따라서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 및 일본과 수교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수교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개방이라고 하면서, 비핵과 개방의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가능하면 빨리 ‘3000’ 비전을 실행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게 ‘비핵·개방·3000’ 구상은 파격적인 제안으로 보일 수도 있다.

상호주의 원칙과 공리공영의 길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남한과 거래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여 남북관계가 본격 가동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분명한 기초를 가지고 북한과의 거래를 확대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남북관계에서의 물질 바로잡기를 실현할 수 있으며, ‘비핵·개방·3000’ 구상이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개방시키면서 남북이 공리공영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신화는 없다」라는 회고록에서 현대건설에 재직중이던 1992년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야쿠티아 공화국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민족이 남북경협을 통하여 북방에 진출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권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북방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고 쓰고 있다.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운반해오기 위해서는 철도연결이 필요하며, 철도연결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잘되어야 한다. 대남정책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북한과 공리공영의 길을 찾는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되고 있다.

